

#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

지난 5월 25일 개최된 '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초청 스티로폴 재활용업계 간담회'에서  
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현수 사무관이 발표한 「2007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」의 내용을 소개한다. (편집자 주)

## 1 재활용산업 대내·외 여건분석(SWAT)

강점	약점	기회	위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잠재력과 성장 동력 보유</li> <li>- 정부의 지원 의지</li> <li>-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규제 정책 강화</li> <li>- 국민 및 기업의 재활용의식 제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취약 (영세, 3D업종, 노동집약적)</li> <li>- 산업화 인프라 부족</li> <li>- 투자규모 미약</li> <li>- 전문인력 부족 및 인력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부상</li> <li>-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</li> <li>- 미개척분야, 높은 발전가능성</li> <li>- 중국 등 대규모 시장 인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약한 경쟁력 구조 지속/악순환</li> <li>- 자생적 경쟁력 확보 미흡</li> <li>- WTO체제에 의한 시장 개방</li> <li>- 사회적 인식 미성숙</li> </ul>

## 2 재활용산업 직접적 지원정책 확대

### 가. 금융지원 확대

현황	개선방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금규모 소규모로 예산대비 3배 이상 수요</li> <li>- 다른 정책 금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금리</li> <li>•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: 6,548억 원, 3.75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활용 육성 융자금 예산 규모 확대 및 금리 하향 조정</li> <li>- 기타 융자금 신청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</li> </ul>

### 나. 조세감면 확대

현황	개선방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산업분류체계상 재활용업체의 정확한 조세감면 현황 확인 곤란</li> <li>• 재경부 추정: 3,383억 원 (2004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활용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및 효과분석</li> <li>• 감면신고 시 업태유형으로 재활용산업 코드 설정 방안</li> </ul>

### 다. 기타 직접적 지원정책 검토

- 재활용업체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
  - 정부·지자체 지정 중·소 재활용업체, 특화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전기·수도요금 등 인하 방안 검토
- 재활용가능자원 운반차량에 대한 유류비 보조
  -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해 물류비 부담 경감
  - 에너지 구조개편에 따른 화물업계 부담가중 완화를 위해 도입한 유가보조금제도(08년 6월 한) 취지는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에 적용 가능
-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검토
  -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기간 단축 및 고용허용 인원수 제한 완화방안 검토

### 3 재활용산업 인프라 구축

#### 가.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

조성목적	향후 계획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활용업이 환경오염시설로 오인되어 도시 주변 및 일반산업단지에 입지 곤란</li> <li>입지 문제점 해소, 유사업종의 집적/공동 물류시설 활용/오염물질 공동처리, 정보교류 촉진을 위해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당성 연구를 통한 조성모델 마련 및 전주 단지 시범사업 후 지역별 조성</li> </ul>
시범사업: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2006 ~ 2007. 171억 원(국고 50%)	기존 산업단지비분양지 활용, 대도시 주변 소규모단지 조성, 지자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 조성 등

#### 다. EPR 제도 개선 추진

단기개선과제	중기 개선과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활용 의무 면제기준 조정: 매출액(10억 원) 기준 → 매출액+출고량</li> <li>재활용 의무율 부여방식: 종장기 목표율 도입/산정방식 전면 개정</li> <li>필름류 포장재 개선: EPR 대상품목 확대, 부담금 대상 예산지원 검토</li> <li>개별 위탁재활용 방식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PR 대상 품목 조정: 불필요한 품목 제외, 필요한 품목 포함</li> <li>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</li> <li>→ 포장재공 공제조합의 통합운영</li> <li>→ 공제조합의 공공적 역할 확대</li> </ul>

#### 라. 재활용 기술개발 체계적 지원

- 재활용기술개발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설기관 설립 검토 \* 기존 차세대기술개발사업과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장 · 단점 취합
- 개발기술의 실용화 확대를 위한 실증기술개발사업 지원

구분	차세대기술개발사업	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
관리기관	환경기술연구원	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
과제선정	Bottom-up 방식 과제 선정	사전 기획 및 Top-down방식
지원규모	소규모 단위과제 지원, 비교적 단기사업	우수기술 Pilot 규모 실증연구, 다년도 기술개발사업 추진
평가	- 종합성 · 체계성 부족 - 상용화 지원체계 부족	- 전문가 기획/관리 -종장기 기술개발 한계 (비상설 관리기관)

#### 마. 재활용 제품 수요확대

- 재활용제품의 인증제도와 환경마크 연계 운영방안 검토
-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 이행실태 관리 강화
-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보제공,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지침 등에 재활용제품 구매 근거 규정 등을 통한 수요창출 지원
- 재활용제품 유통 · 판매 체계 구축 방안 마련
- 통합 필요성 · 타당성, 관련업계 입장 등 분석

### 4 기타 재활용 촉진 지원방안

#### 가. 폐기물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

- 신 · 재생에너지 이용 · 보급기본계획: 2002년 1.4% → 2011년 5% 목표
- \* 2002년 신 ·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재생에너지가 93.5% 차지
-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64542톤/일이나 에너지로의 재활용 미흡
- \* 수소 · 연료전지, 풍력, 태양광 3대분야 위주의 정책 추진

-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 · 이용 촉진방안 마련
- MBT 확충을 통한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회수 촉진 및 매립 감소
- \* 원주 연료화시설 준공(Ⅱ, 2), 2012년까지 8개 추가 설치
- 재생연료류(WDF), 고품연료제품(RDF) 품질기준 · 관리제도 마련
- 폐기물 재생에너지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

#### 나. 지자체의 재활용기반시설 및 폐자원 집하/보관창고 확충

- 2000년 이후 지자체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30% 국고 보조
- 2006년: 147억 원, 2007년: 104억 원
- 국고보조를 상향조정 및 국고보조 재원 확대 추진
- \* 처리용량 확대, 신기술 · 시설 도입, 도시확장 · 민원에 따른 지하 입지 등 사업비 증가
- 첨단시설 도입/선문 컨설팅기능 강화/지자체 주관 폐자원 집하 · 보관 창고 설치 시 국고보조 등 제도개선 추진

#### 나. 지자체 재활용 선별장 운영개선

현황 및 문제점	재활용 선별장 운영지침 마련/시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치단체 재활용자원 수거 · 운반 및 선별장 운영</li> <li>→ 직영 101개(43%), 직영 + 민간대행 617개(26%), 민간 72개(31%)</li> <li>- 위탁운영 시 최고가 입찰제에 따른 과다경쟁 수익성 악화</li> <li>- 재활용 지원비가 지자체 재원으로 흡수되는 상황 발생</li> <li>- 위탁계약 단기계약 선호로 수탁업체의 투자 · 발전가능성 제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별장 운영과 재활용 제품 판매를 분리 발주</li> <li>- 통합 발주 시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발주</li> <li>- 재활용품 판매 시 업체의 시설 및 환경여건 고려</li> <li>- 선별 후 잔재물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로 처리</li> </ul>